

의안번호	제 359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6월 일 (제 311 회)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2년 6월 14일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59
----------	-----

제안연월일 : 2012. 6. 14.
제 안 자 : 건설소방위원장

□ 주 문

-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KTX민영화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철도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민영화추진 재검토’를 건의하여 국민 모두와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수서발경부·호남 고속철도 KTX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기 위한 민영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민영화가 될 경우에는 요금인상, 사고위험증가,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와 폐지 등의 심각한 문제 유발우려가 있고,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으로 공공성이 결여되고 안전문제 소홀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 ‘경쟁체제 도입’은 허울뿐이며 국가기간산업을 민간기업에 특혜로 넘겨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철도공사와 철도 시설공단을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함

□ 건의사항

- 국내 유일한 철도 흑자노선인 KTX의 노선·지역독점의 특혜적 운영권을 넘기는 ‘재벌특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모두와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의하려는 것임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

김황식 국무총리님 !

○○○ 국회의장님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 고속철도 부산행과 목포행 KTX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기 위한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 ‘고속철도 요금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철도시설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과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어 민영화가 될 경우 철도이용객들의 안전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KTX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민영화가 아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스템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현재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적자노선과 열차에 대한 교차보조를 해주고 있으나 민영화가 될 경우에는 요금인상, 사고위험증가,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와 폐지 등으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성이 파괴되어 국민 모두가 철도교통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됨으로 ‘경쟁체제 도입’은 허울뿐이며 국가기간산업을 민간기업에 특혜로 넘겨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충북도의회는 민영화 추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KTX 민영화 문제는 결국 철도산업 전체의 민영화로

진행되어 재벌기업과 외국투기자본의 돈벌이 각축장으로 변모해 국민의 보편적 교통기본권을 위한 공공성이 완전히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해당 기업은 KTX만 운영해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수익이 감소해 적자가 심화될 것이고 결국엔 공공철도교통체계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장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철도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철도 흑자노선인 KTX의 노선·지역독점의 특혜적 운영권을 넘기는 '재벌특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 모두와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